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갑	
후보자명	이학재	기호		소속정당명	새누리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재추진				

● 이유

- 인천광역시를 동서로 양분시킨 경인고속도로를 그대로 존치시켜서는 안 됨 ·루원시티의 전제 사업이었는데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대 재개발, 재건축 단지들을 모두 몰락시켰음
- 루원시티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인천 서북부 개발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함
- · 특히 주민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행정을 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

● 공약의 목표 및 방법

- 서인천IC부터 가좌IC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{지하고속도로 건설(4차로), 상부도로 간선화(4~6차로)}

●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 가능성

- 시행주체의 사업비(시, 공기업 등)로 충당 가능, 필요시 국고지원 추진

공약번호: 2 공약 제목 : 청라국제도시 조기 활성화

● 이유

- 청라국제도시는 LH공사와 인천시 모두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학교 등 교육인프라 미비로 주민들, 특히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
- 청라국제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시설의 건설과 함께 생활·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, 로봇을 테마로 한 로봇랜드 및 문화관광단지 조성
- 특히 교육인프라를 완비하여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자 함

● 공약의 목표 및 방법

- 시티타워, 호수공원, 로봇랜드, 유통물류단지 등 핵심 시설 건설
- 청라국제도시 생활인프라 조기 구축
- 청라역, 검암IC, 청라~강서간 BRT, 청라내 GRT, 서곶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및 버스 교통망 재정비
-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유치

-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유치
- 교육 인프라 완비 및 유치원, 혁신학교, 특수목적학교 등 유치
- 한류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단지 조성
-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 가능성
 - 시행주체의 사업비(시, 공기업 등)로 충당 가능, 필요시 국고지원 추진

공약번호: 3 공약 제목 : 깨끗하고 활기찬 서구 구현

● 이유

- 수도권매립지, 발전소, 서부산업단지 등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구를 청청한 서구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

● 공약의 목표 및 방법

- 발전소, 서부산업단지 등에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강화 및 경관개선사업 지속 추진(관련 법 개정)
- 청라국제도시 및 김포매립지 녹화사업
- 경인아라뱃길 드래곤 보트 축제 개최
-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유치
-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 가능성
 - 시행주체의 사업비(시, 공기업 등)로 충당 가능, 필요시 국고지원 추진

공약번호: 4 공약 제목 :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

● 이유

-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반대는 쓰레기 발생자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아울러 2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 온 우리 지역의 생존권 문제임

● 공약의 목표 및 방법

-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착수
-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화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
- 「수도권매립지의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」 제정, 「악취방지법 개정안」개정 추진
-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 가능성
- 시행주체의 사업비와 해당 자치단체들의 예산으로 충당 가능, 필요시 국고지원 추진

공약번호: 5 공약 제목 :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정상화

● 이유

-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대상부지는 암흑천지의 유령도시로 방치상태에 놓여 있고, 사업지연으로 인해 1년에 880억원이나 되는 이자손실이 추가 발생하고 있음
-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대상지역 인근의 재개발재건축도 일반도로화의 일방적 포기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주저앉아 있음

● 공약의 목표 및 방법

- 앵커시설 유치(시청, 공공기관, 서북부복합환승터미널, 민간기업 등)를 통하여 가정오거리를 교통, 경제, 문화, 행정의 중심지화 추진
- 가정오거리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재정착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
-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 가능성
 - 시행주체의 사업비(시, 공기업 등)로 충당 가능, 필요시 국고지원 추진